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1.5)

1. 한일 정상 환담(11.4) 관련

□ [동향]

- 한일 양국 정상은 11월 4일 태국 방콕의 ASEAN+3 정상회의 대기장에서 11분간 통역만을 대동하고 단독 환담을 실시¹⁾

□ [일본 정부 동향]

- 스가(菅)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는 않으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까지와 일관되게 한국이 현명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할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고 발언²⁾

○ 일본의 원칙적 입장은 (개인 청구권을 포함하여) 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임.

- 모테기(茂木) 외무장관은 “10분간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큰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고 하면서, “문 대통령은 고위급 협의를 언급하였지만, 협의의 레벨(수준)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며, 한국 측이 강제징용 관련 문제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인식을 재차 강조³⁾

- 외무성의 한 관료는 “한국 정부, 입법부가 지혜를 내야만 한다” 고 하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촉구⁴⁾

□ [일본 언론 동향]

- 아사히(朝日)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외교 당국자간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고 논평⁵⁾

1) 다만 이번 환담에서 수출규제, 지소미아 종료 등의 현안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보도

2) 「「徴用」問題など解決向け韓国側は賢明な対応を 官房長官」 『NHK NEWS WEB』(2019. 11. 5).

3) 「「10分間ことば交わしたこと 大きな評価は難しい」外相」 『NHK NEWS WEB』(2019. 11. 5).

4) 焦点：押す韓国 米意識、首脳対話急ぐ 引く日本 課題停滞、不信残る 『毎日新聞』(2019. 11. 5).

-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도 쉽게 양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으로 가는 길이 먼 것이 현실이라고도 평가
-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회담 결과에 대해 한일 양측의 인식이 크게 달라서, 이번 회담이 양국의 갈등을 풀어갈 계기가 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이라고 보도⁶⁾
- 이번 대화를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가고 싶은 문 대통령과,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동 없이는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일본 입장 사이에 온도차가 눈에 띈다는 평가
-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상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의 시행 가능성(연말~내년초) 등으로 양국 간 대립은 한층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
- 산케이(産経)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양국의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번 환담이 앞으로 정식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전망⁷⁾
- 또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서, 당면한 현안에서 양국 간 진전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고 평가⁸⁾
- 시즈오카(静岡) 신문은 악화된 양국 관계를 타개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⁹⁾
- 한편 12월 하순에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정상회담 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전망¹⁰⁾

5) 「首相、文大統領と会話 外交当局間で協議、確認 約10分」 『朝日新聞』(2019. 11. 5).

6) 「焦点：押す韓国 米意識、首脳対話急ぐ 引く日本 課題停滞、不信残る」 『毎日新聞』(2019. 11. 5).

7) 「日韓首脳 11分間面談 首相、徴用工の早期是正要求」 『産経新聞』(2019. 11. 5).

8) 「文氏「対話」演出も溝深く 日韓面談 軍事協定破棄 迫る期限」 『産経新聞』(2019. 11. 5).

9) 「原則的立場変えず 日 融和ムードを演出 韓 打開見通し立たず 首脳 1年ぶり対話」 『静岡新聞』(2019. 11. 5).

10) 「日韓首脳 1年ぶり対話 徴用工、首相の立場不変」 『静岡新聞』(2019. 11. 5).

2.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

□ [동향]

-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한국 기업+일본 기업+국민성금’이라는 새로운 강제징용 피해 해법을 제안¹¹⁾
- o 이 해법은 한국,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 기금을 설립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위자료 지급)하는 방식임.
- o 또한 국회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금에는 현재 남아있는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이 포함될 예정임.

□ [일본 언론 동향]

- NHK는 문 의장이 이 해법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한국 측에서 동의를 얻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¹²⁾

3. 지소미아 종료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NHK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이 약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국 측의 태도에 변화(연장 결정)가 발생할지 주시하고 있는 상황¹³⁾
- 고노(河野) 외무장관은 11월 5일 지소미아가 11월 하순에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 “협정의 종료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며, 한국 측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고 발언¹⁴⁾

11) 「문의장, '韓기업+日기업+국민성금' 새 징용피해 해법 제안」 『연합뉴스』 (2019. 11. 5).

12) 「韓国国会議長「徴用」めぐる問題“基金づくり原告側に慰謝料”」 『NHK NEWS WEB』 (2019. 11. 5).

13) 「日韓首脳がやり取り 日本政府は韓国側の姿勢変化を注視」 『NHK NEWS WEB』 (2019. 11. 5).

14) 「河野防衛相「北朝鮮のミサイル 同系統の新型 3分間隔で発射」 『NHK NEWS WEB』 (2019. 11. 5).